

‘공천헌금’ 수사 박근혜 치명타되나

친박 핵심인물 연루...공천쇄신 물거품

朴캠프 당혹...당 “검찰 수사 지켜보자”

새누리당의 지난 19대 총선 과정에서 수억원의 공천헌금이 오갔다는 의혹은 새누리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대형 악재가 될 가능성이 크다.

박 후보가 비대위원장 시절 정치쇄신 차원에서 강도 높은 공천 개혁을 주문해 왔다는 점에서 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현기환 전 의원은 친박(친박근혜)계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부산 출신인 현 전 의원이 부산지역 공천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설이 파다해 공천헌금 수사가 선관위 고발 수준을 벗어나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공천헌금 수사가 민주당을 당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공천헌금 문제가 여야 정치권에 일파만파의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4·11 공천 당시 박 후보는 각종 언론 인터뷰나 회의 등을 통해 “공천이 아발로 정치 쇠신의 첫 단추”며 “공천과 관련해 어떤 불법이 발생한다면 즉

각 후보 자격을 박탈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 개인의 힘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고 누구나 납득할 만한 기준과 틀에 따라 후보를 내겠다는 이른바 ‘시스템 공천’ 방안도 제시했다.

이 때문에 공천헌금 의혹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새누리당의 쇄신작업이 물거품이 되고 이는 박 후보의 대권행보에 치명타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때문에 이날 새누리당은 “또 돈 문제냐”며 사태의 진의를 파악하고 어떻게 수습해야 하는지에 대해 분주한 모습이다. 박 후보 캠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과거 ‘차떼기’ 대선자금과 돈봉투 사건 등으로 돈 문제의 악몽이 많은 새누리당과 박 후보 입장에서는 이번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없기 때문이다.

한 친박계 인사는 “만일에 공천헌금 수수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 정치적 파문이 새누리당 전체는 물론 당장 경선과 본선을 앞둔 박 전 위원장에게 치명적 저명하다”면서 “매우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다른 친박계 한 의원은 “돈을 받았



2일 오전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열린 ‘대전·세종·충북·충남 합동연설회’에서 한 지지자가 박근혜 후보에게 편지를 전달하려 하자, 경호원이 이를 제지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한 공천위원이 친박계인데다 박 후보가 당시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책임 소재 등을 두고 파상적인 정치 공세가 있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사건을 2~3일 전에 사정당국으로부터 듣고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경선과 본선을 앞둔 박 전 위원장에게 치명적 저명하다”면서 “매우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이날 오후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대통령후보자 선거 대전·세종·충북·충남 합동연설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연히 검찰에서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의혹 당사자들이 강하게 부인하는 상황인데 당에서 선제적으로 입장을 낼 생각은 없느냐”는 물음에 “(당사자들의) 말이 서로 주장을 달리고 어긋나니 검찰에서 확실하게 의혹 없이 밝혀야 되겠다”고 답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용섭 의원 “경제파탄...영수회담 열자”



민주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2일 “한국 경제가 심상치 않다. 여·야·정 정책협의체를 가동하고 영수회담도 개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가 파탄 지경인데도 이를 책임져야 할 정부와 여당은 잣대에만 정신이 팔려 있다”며 “최근 이해한 당 대표가 내수 진작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야·정 정책협의체 가동을

제안했지만,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특히 “새누리당도 경제 파탄의 책임이 있는데, 현 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하면서 야당과 안철수 공경에만 힘을 쏟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서민경제 회생을 위해 모든 노력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정책위장은 또 “8월 임시국회가 민생경제 활성화와 내수 진작 방안마련을 위한 생산적 국회가 되도록 여·야·정 정책협의체를 가동하고 영수회담도 진행하는 한편, 추가 편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박주선 의원 선거법위반죄 적용여부 쟁점

■ 항소심 첫 공판...검찰·변호인 공방

“경선과정 사전 선거운동” “공모사실 없다”

국회의 체포동의 끝에 항소심 재판부에 의해 법정구속된 박주선(63·광주시 동구·무소속)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간 공방이 예고됐다. 특히 불법행위가 발생한 당내 경선운동을 선거(본선)운동으로 볼 수 있을지가 가장 큰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고법 형사1부(이창한 부장판사)는 2일 오전 2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기소패법정구속된 박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 부장판사는 “경선 모바일 투표에 대비해 선거인단을 모집한 것이 선거운동이 되는지 의문스럽다”며 “경선 통과가 곧 당선인 상

황이라고 하더라도 이 말은 경선에서 이기면 본선을 안 해도 된다”는 취지로 이해될 수도 있으니 검찰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 간 공모(지시) 여부도 쟁점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경선과정에서 생긴 불법행위지만 광주지역에서 민주당계 후보의 당선이 유력한 만큼 이를 선거운동으로 간주했다. 1심 재판부도 이를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다.

이와는 달리 항소심 재판부가 경선운동을 선거운동의 사전 행위로 본다면 박 의원 등은 감형도 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

다. 이날 공판은 박 의원 외에도 유대명 동구청장, 박 의원 선거캠프 관계자 등 피고인 6명을 대상으로 30여 분간 항소이유 설명, 증인 채택 등 과정으로 진행됐다.

박 의원 측 변호인은 “1심이 선거운동의 범위를 너무 폭넓게 인정했고, 공모한 사실도 없다”며 항소이유를 설명했다.

수의를 입은 박 의원은 공판이 끝나고 방청석에 있는 지인과 눈을 맞추고 미소를 띠는 등 여유를 보이기도 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1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박 의원은 4·11 총선을 앞두고 사조직 등을 동원해 경선운동을 하고 광주시 동구 관내 동장들의 식사자리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임내현 의원 “4대강 사업 비자금 의혹 철저히 수사해야”



민주당 임내현 의원은 2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검찰은 이명박 정권의 ‘4대 강 살리기’ 공사 비자금 형성 의혹에 대해 축소·은폐하지 말고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검찰은 낙동강 살리기 관련 사업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일

부 비자금 형성에 대한 단서를 확보하고도 비자금 규모 및 사용처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은 채 축소·은폐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철곡보 공사비 관련 수사에서 해당 대기업 관계자가 제출한 USB엔 800억 원의 비자금을 형성한 내역과 공무원 수십 명에게 뇌물을 지급한 정황 등이 담겨 있다”며 “자료의 신빙성이 충분한데도 검찰 수사가 확대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번 수사에서 해당 대기

업은 현재 누적적자 1조1200억 원대를 바라보고 있고, 올 연말까지 3000억원 이상의 추가 적자가 예상됨에도 분식회계를 통해 적자를 감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검찰이 바로 수사에 착수하지 않을 땐 비자금 중 상당 부분이 정권의 실세에게 전달됐다는 추가 의혹 및 전·현직 검찰 고위층 수사 무마 시동 등 사실확인을 거쳐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국회 예결특위 광주·전남 의원 4명 포함

국회는 2일 여·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50명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예결위엔 민주당계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 갑)과 이윤석 의원(무안·신안),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비례대표),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순천·곡성) 등 광주·전남지역 의원 4명이 포함됐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25명 ▲통합진보당 2명 ▲무소속 1명 등이



김동철 의원



이윤석 의원



주영순 의원



김선동 의원

다. 예결위는 정부 예산과 결산을 최

종적으로 심의·확정하는 특별위원회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公認

漢字·漢文指導師資格

※教育部科學技術部 國家公認 研修生募集

구 분	광주여자대학교(15기)	광주교육대학교(6기)
개강일시	·금요일 오전반: 2012. 9. 7.(금) 09:10 (특급반) ·토요일 오전반: 2012. 9. 8.(토) 09:10 (중급반) ·토요일 오후반: 2012. 9. 8.(토) 14:10 (특급반)	·월, 목 아간반: 2012. 9. 3.(월) 19:00 (초급반) ·목요일 오전반: 2012. 9. 6.(목) 09:10 (중급반) ·토요일 오후반: 2012. 9. 8.(토) 14:10 (특급반)
모집기간	2012. 7. 26.(목)~9. 8.(토)	2012. 7. 26.(목)~9. 8.(토)
수업기간	2012. 9. 7.(금)~2013. 2. 16.(토) (6개월 24주 96시간)	2012. 9. 6.(목)~2013. 2. 16.(토)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시간	·매주 금·토요일 오전반 09:10~13:00	매주 목요일 오전반 09:10~13:00 토요일 오후반 14:10~18:00 월요일·목요일 아간반 19:00~21:00
수강료	₩350,000 (예금주:광주여대) ·광주은행: 148-107-307803	₩350,000 (예금주:광주교대) ·우체국: 503557-01-005018
수료후 특전	·1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한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 부여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병과 후 교육)강사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사범)취득기회 부여	·1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한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 부여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병과 후 교육)강사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사범)취득기회 부여
원서교부 및 접수처	·문 의: 062)950-3582~4 ·지도교수: 011-614-4160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always.kwu.ac.kr	·문 의: 062)520-4243 ·지도교수: 011-614-4160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www.gnu.ac.kr/

무등빌딩임대

무등산이 보이는 최상의 조망권,
지하철 역세권에 위치한 편리한 교통권,
금융지역, 상업지역이 함께 어울어져있는
업무의 편의성,
신형 주차시설 완비·중앙 공급식
냉·난방시설,
쾌적한 업무
환경

·면 적 : 330평 / 층
(분할임대 가능)
·용 도 : 사무실, 판매시설

임대문의 062-222-0527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경매투자

경매 배우면서
수익내실분

→ 특수물건과 NPL 부실채권만 취급
→ 교육비 / 임차활동비용 회비있음
→ 수료중 단독 / 공동투자 가능
→ 수료후 평생 무료상담 혜택

투자자모심(이사대우)

1. 자본금 5억원이상 가지신분
2. 경매 낙찰물건에 투자하실 분
3. 가등기 / 근저당으로 법적보장
4. 개인사무실 / 활동비용 제공

[주] 오천경매
투자 연구소
OC & A Investment Institute

H·P 010 3605 5000 TEL 062 525 5000
광주광역시 동구 수기동 23-2번지
E-mail : csg5000@hanmail.net

못 받은돈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공증문서 ■대여금
■법원판결문 ■운송료
■각종채권 ■구상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채무자 전국 재산조사 가능
·채무자 신용조사
·법인재산조사, 신용조사
법원 재판중인 사건 확인

의뢰시 수수료없음
(회수금에 대한 후불제도)
필요에 따라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타 신용정보사와 비교 탁월한 회수실적”
“전국 지점으로 전국 소재 파악”
“수시로 의뢰인에게 상황보고”

세일신용정보(주)

전문상담 010-8617-7899